



J E O N B U K D E V E L O P M E N T I N S T I T U T E

| 열린단상

쾌적하고, 아름답고, 특색있는 전북 만들기

CONTENTS

- 1_ 열린단상
- 2_ 연구원 리서치 1 / 조경욱
- 3_ 연구원 리서치 2 / 이승형
- 4_ 연구원 리서치 3 / 김보국
- 5_ 연구원 리서치 4 / 나상균
- 6_ 연구원 리서치 5 / 이동기
- 7_ 포럼지상중계
- 8_ 연구원 소식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취업과 교육 등을 위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가동이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물려드는 사람들을 위해 주거공간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나머지 지난날의 도시화는 자연의 훼손, 인간과 자연의 단절, 환경오염의 심화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최근 소득증가와 주5일 근무제의 확산, 개발주의적 관행이 아닌 생태주의적 접근 확산, 요소 투입형 성장방식에서 혁신주도형 성장방식으로서의 변화 등은 삶의 양이 아닌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간의 질이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창조형 경제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식기반사회, 창조형경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지역사회가 공간의 높은 수준의 질과 삶의 질을 확보할 때 다음 단계의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지역의 창조'라는 비전하에 '쾌적하고, 아름답고, 특색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지역은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며, 이들을 활용하기 위해 좋은 기업들이 모여들어 많은 투자를 하게되면 그 결과 좋은 일자리가 생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 세계 각지의 경험적 사례에 따른 것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특색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화 과정에서 훼손된 자연환경과 녹지

를 복원하여 인간과 자연을 재결합하는 데 중점을 두는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 도시 전체의 아름다움과 개별 건축물의 미관을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경관과 건축문화의 질적 제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지역내 교류 활성화를 통한 약화된 지역공동체 회복과 학교와 자원조직 등을 매개로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공동체형성 및 복원, 살기 좋고 특색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원에서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 서해안권역 녹색경관벨트 조성, 농·산·어촌 체험마을 종합관리 방안, 농촌 고령여성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라북도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서 살기좋은 전북을 만들기 정책을 뒷받침 하고자 한다.

그러나 살기 좋은 전북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연구자들에 의한 방향제시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비취볼 때 교통문제나 환경문제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탁월한 리더십의 역할이 크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주민참여와 협치가 중요시되고 있다. 즉, 전북지방정부는 협력의 촉진자이자 지원자로서 머물고 시민이 제도변화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전문가, 지역주민, 전북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 형성이 '살기 좋은 전북 만들기'의 키워드인 것이다.

전북발전연구원장 | 한 영 주



저출산 해법을 위한 정책방향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8명으로 전년의 1.16명에 비해 0.08명 줄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유엔인구기금(UNFPA)기준으로 지난해 전세계 평균 합계 출산율 추정치인 2.6명이나 선진국 평균인 1.57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국인구학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을 1.2명으로 가정할 경우 2015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2300년에는 전체 인구가 31만명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은 '인구지진'으로 표현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정치·경제 시스템의 변화는 물론 문화의 풍속도를 바꾸고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사안이다. 저출산은 노동력 규모가 줄어 생산성을 떨어뜨려 사회를 이끄는 동력을 잃게 한다. 생산인력이 줄게 되면 그 여파로 저축률이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재정수지의 악화를 불러오게 된다.

경제성장에 따른 출산율 하락은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 바, 그 원인은 거시적 문제와 미시적 문제가 복합되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여건과 주관적 상황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결혼, 가족, 자녀등과 관련된 개인 가치관의 변화, 미혼율의 상승, 결혼연령 및 출산연령의 상승 등을 촉발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제도적·구조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IMF 이후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경기침체로 인한 직장의 불안정, 특히 여성의 경우 가장이 아니라 이유로 남성보다 먼저 해직당하곤 하는 현실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점차 증가하는 사교육비 및 물가상승률, 그리고 대학까지는 부모가 책임져야한다는 의식은 자녀양육에 물적·심리적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다. 게다가,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치관의 확산과 이혼 등의 증가 역시 출산·육아에는 악조건임에 틀림없다. 이와 함께, 여성들은 점차 자신의 직장을 가지고자 하는데 기업 및 회사에서는 아이를 가진 여성들, 혹은 아이를 낳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물러나라는 유형, 무형의 압력을 가하는 것도 사회적인 출산율 감소의 중요한 요인이다.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정부에서는 며칠에 한 번은 새로운 '저출산 고령화 해결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저출산 대응방안들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논의가 지나치게 저출산이라는 용어에만 집중된 나머지 '단순한 숫자로서의 출산율 제고'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구정책'의 차원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출산 자체보다는 가족복지나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저출산 대응책은 여성과 아동, 가족의 시각에서 논의를 전개함으

로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출산정책의 모든 기저에서 남성의 삶을 건드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출산장려 정책의 하나인 육아휴직에 대한 수혜율을 통해 반쪽적인 정책의 성공사례를 보자.

2004년 노동부의 상반기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실시 현황분석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여성은 4,212명인데 비해 남성은 78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인 2003년 상반기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인 40명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함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장려정책들은 여성으로서의 이해와 필요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일차적으로 여성의 필요보다는 출산율의 저하 없이 여성 노동력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국가의 필요에서 나오는 것이다. 양육에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즉 육아휴직 기간 가운데 일정 기간을 남성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을 하는 정책,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집중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직장 탁아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정책 등 남성의 삶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동시에 출산율을 일정정도 유지하기 위한 현재의 정책으로는 저출산 해결에 대한 전망은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는 아동과 여성, 가족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는 정책의 수립이 밀바탕 되어야 한다.

외국 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접적인 재정적 유인책과 출산율 사이에는 '최소의 미약한 관계'만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출산 및 부모 휴가, 아동양육과 같은 양육과 일의 양립 지원책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남성과 여성 관계상의 평등증가가 출산율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과 관련된 논의는 보다 넓은 시야에서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틀 안에서 다뤄져야 함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출산 증가 유인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자녀양육 환경정비를 목표로 할 때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을 포함한 일하는 방식의 재검토"라든지 미혼모 가정, 한부모 가정, 입양자녀의 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허용적인 사회가 될 때 출산율이 안정적인 사회로 유지될 수 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의 기본방향으로는 크게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적 환경 개선, 사회제도적 기반확충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아이의 양육은 여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더 가지기란 여성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 여성들의 '출산파업'이라는 현실이 관점에 따라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도 있는 것이다.

여성정책연구팀장 | 조 경 옥

쌀밥용 수입쌀 유통과 대응방안

지난해 11월 쌀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예견되었던 밥쌀용 수입쌀이 마침내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되었다. 쌀협상 결과의 이행을 위해 지난 3월23일 시판용 미국산 쌀 '칼로스'가 처음으로 부산항에 들어왔다. 칼로스 외에도 중국 동북3성의 칠하원 쌀이 도입되었고, 5-6월에는 호주의 선라이스 쌀, 태국 쌀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4월 밥쌀용 미국산 '칼로스'에 대한 첫 공매가 실시돼 총 1,372톤 중 40톤이 낙찰되었다. 전자입찰시스템 방식으로 이루어진 첫 공매는 당초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43개 업체 중 16개 업체만 참가했다. 이는 농민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우려해 상당 수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6차에 걸쳐 공매가 이루어졌으나 4, 5차 공매의 경우 유찰 사태가 빚어지고 6차의 경우 유찰 사태는 간신히 모면했지만 낙찰률은 1.97%로 여전히 저조했다.

밥쌀용 수입쌀의 시장유통이 현실화되면서 농업인들은 값싼 수입쌀이 우리 쌀 산업을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연간 밥쌀용 쌀의 30% 정도를 소비하는 가정박 소비(외식업체와 급식업체 등)의 경우 수입쌀 구매의 향조사에서 수입쌀 가격이 우리 쌀에 비해 일정 수준 싸면 수입쌀을 구입하겠다는 반응(외식업체 56%, 급식업체 59%)이 높은 것을 보면, 음식업 및 급식업체에서의 국산 쌀의 위축이 현실화될 것 같다. 서민층을 비롯한 식당, 급식업소 등이 국산 쌀보다 저렴한 수입쌀을 구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잠재적 소비층이 형성되고 입맛이 길들여지면, 향후 수입쌀의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수입쌀 소비층은 그대로 유지돼 국산 쌀의 소비층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 속에 농민단체가 수입쌀의 국내 창고 입고를 반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 판매 저지 시위를 계획하는 등 수입쌀 시판에 대한 거부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저지투쟁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체감한 농민단체는 우리 쌀 애용을 호소하는 소비자 운동으로 방향을 바꿔 쌀 수입에 맞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입쌀 안 먹고 안사고 안팔고 안받기'를 표방하는 4불(不)운동을 기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쌀을 사용하는 음식점에는 일종의 인증 스티커를 부착해 고객들의 애국에 호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외국산 쌀 수입 자체는 막지 못하더라도 국내에 들어온 쌀이 더 이상 받을 못 불이도록 하자는 의도이다.

밥쌀용 수입쌀이 처음 도입된 올해 농업인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10년 후 쌀 관세화, FTA(자유무역협정) 등의 큰 흐름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10년 후의 관세화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소비자·정부가 각각의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인은 우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2014년 이후 국내 쌀시장이 관세화로 전환될 경우 누구든 관세만 지불하

면 외국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쌀시장이 완전 개방되더라도 소비자가 국내산 쌀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농업인은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안전하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기술교육 및 연구, 고품질 종자의 확보와 파종, 농약과 화학비료 시비량 감소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소비자는 국내산 쌀과 수입쌀에 대한 품질수준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가격지불 의사를 가져야 하며, 주곡 이상의 의미를 가진 쌀에 대한 소비자의 애정은 쌀산업과 농촌의 발전을 밑거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산 칼로스 쌀과 중국산 칠하원 쌀, 호주산 선라이스 쌀은 국산쌀과 유사해 원산지 식별이 어렵고 또한 10kg, 20kg으로 수입된 쌀을 3kg, 5kg으로 재포장해 판매할 수 있으며, '몸에 좋은 쌀', '맛있는 쌀' 등 국산 쌀과 유사한 브랜드 표기도 가능하다. 또 국산쌀과 수입쌀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유통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유통방식은 값이 낮은 수입쌀을 국산쌀로 둔갑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쌀에 대한 유통이력제를 실시해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음식점이나 급식소에서 의무적으로 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수립하여 부정유통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농업인들이 소득 하락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도록 소득안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며, 쌀 고품질화를 위해서 우량 종자 보급, 건조·보관시설 보충, 유통체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국 쌀 생산량의 15%를 생산하고 있는 전북은 생산량의 60% 이상을 도외에 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 쌀과 식품산업간 푸드체인의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해 외식·전처리업체의 전북쌀 구매자금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판매촉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전북 쌀의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확보가 중요하므로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쌀 유통업체가 산지, 품종, 도정일자 등 포장양곡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적극 나서야 하며, 소비자단체의 시중 브랜드쌀에 대한 점검-평가기능을 확대시켜 생산업체의 자율적인 품질 관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10년 후면 쌀 관세화가 추진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10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우리 쌀산업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가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산업·경제연구팀장 | 이승형

자연테러 황사, 범국가적 대책 서둘러야

황사현상이란 중국 동북부와 서부 사막지대에서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이동해 온 모래먼지를 말한다. 특히 황사는 중국의 신장과 황하 상류지역, 몽고와 중국의 경계에 걸친 넓은 건조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황사현상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황사의 발생 빈도가 잦고 농도도 짙어져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몽고는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근간으로 하면서 천연자원을 이용했으나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총 경작면적의 1/2과 목초지의 1/3이 척박한 땅으로 변했다. 또한 300개 이상의 호수와 강이 사라지거나 100종이 넘는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의 역사에서 황사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115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한국에서도 서기 174년 신라 아달라왕 때부터 흙이 비처럼 떨어지는 우토가 나타났다고 한다. 중국에서 흑폭풍으로 알려진 황사는 매년 3월~5월까지 약 3개월 동안에 나타나는데, 발원지에서 연중 20회 정도 발생하며, 그 중 10~30%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겨울철에도 발생하는데 문제가 있다. 겨울철 황사로 인해 내리는 눈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지만 일본 홋카이도의 경우 1950년에 눈이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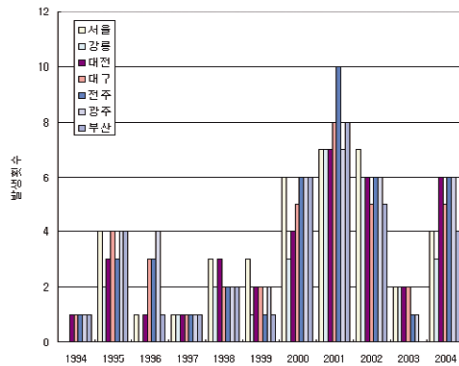
전라북도 역시 <표 1>과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황사에 의한 영향이 많이 받고 있는 지역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사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예·특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발표기준(약한황사 평균 미세먼지 200~300 $\mu\text{g}/\text{m}^3/\text{hr}$, 보통황사 평균 미세먼지 300~500 $\mu\text{g}/\text{m}^3/\text{hr}$, 강한황사 평균 미세먼지 500 $\mu\text{g}/\text{m}^3/\text{hr}$ 이상)과 특보발령에 따른 단계별 행동요령이 마련되어 있다. 2006년 4월 8일 오전 전라북도 전역에 걸쳐 1시간 평균 미세먼지농도 500 $\mu\text{g}/\text{m}^3/\text{hr}$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리라는 황사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이것은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금지권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권고,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가 요구되는 수준이었다.

<표 1> 황사발생현황(1994~2004)

연도 \ 지점	서울	강릉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부산
1994	0	0	1(2)	1(1)	1(2)	1(1)	1(1)
1995	4(13)	2(4)	3(7)	4(8)	3(5)	4(7)	4(5)
1996	1(1)	0	1(1)	3(5)	3(4)	4(5)	1(2)
1997	1(1)	1(1)	1(1)	1(1)	1(1)	1(1)	1(1)
1998	3(13)	2(9)	3(14)	2(10)	2(11)	2(10)	2(7)
1999	3(6)	1(3)	2(5)	2(5)	1(4)	2(5)	1(4)
2000	6(10)	3(6)	4(9)	5(8)	6(11)	6(12)	6(9)
2001	7(27)	7(24)	7(24)	8(22)	10(23)	7(21)	8(21)
2002	7(16)	6(14)	6(15)	5(12)	6(13)	6(14)	5(11)
2003	2(3)	2(3)	2(2)	2(2)	1(1)	1(1)	0
2004	4(6)	3(5)	6(10)	5(6)	6(9)	6(9)	4(5)

자료 : 정부합동,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2005. 3. 8

주 : ()발생일수



<그림 1> 년도별 황사발생횟수 (1994년~2004년)

황사는 대기중 미세먼지의 농도를 시간 최고 2,070 $\mu\text{g}/\text{m}^3$ 까지(02.4.8서울, 평상시 27배수준) 급격하게 증가시키며 산업, 보건, 농축산 분야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먼지는 입자크기가 10 μm 이상인 거대입자는 바람에 날려 올라간 토양의 먼지 및 해염을 비롯한 자연적인 원인으로부터 발생된 것이 대부분이다. 10 μm 미만의 미세입자는 화석연료의 연소, 자동차 배출가스 및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등과 같은 인위적인 발생원에 의한 것과 SO₂나 VOCs등이 응축과정을 거쳐 가스상 물질에서 입자상 물질로 변환된 2차 먼지로 생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대입자는 인체 유입시에 코의 섬모나 기도 등에 걸려 폐 깊숙이 침투되지 못하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그 자체로서 인체피해 뿐 만 아니라 금속, 유기물, 산, 이산화질소 그리고 기타 오염물질 등과 결합하여 2차 오염물질로 변환 후 인체 흡입 시 기관지 또는 폐포 부위에 도달, 침착하기 쉽기 때문에 건강상의 피해를 유발한다. 이것이 우리가 황사에 대비해야 할 이유이다. 한 예로 미국 151개 대도시의 성인 55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미세먼지 오염수준 순위가 최상위인 도시는 최하위의 도시보다 사망률이 17%나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자동차의 미세먼지로 인하여 인구 100만명 당 약 1,000명 정도가 매년 암에 걸려 추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 환경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의 환경악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석탄소비와 각종 개발 사업은 세계 어느 지역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은 현재 국가 에너지의 75%를 오염배출이 심한 석탄으로부터 얻고 있으며, 그 소비량은 전 세계 3분의 1에 달한다. 여기에 2003년을 기점으로 세계 2위의 석유소비국이 되었다. 국토의 16%가 이미 사막으로 변해 있는데, 복원보다는 개발에 더 열중이다. 개발의 지표가 되는 시멘트 생산량은 전 세계 40%를 차지한다. 또한 중국은 현재 전 세계 4만여개의 대규모 댐 중 거의 반에 가까운 1만 9000개를 갖고 있지만 계속해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국 전력의 10%에 해당하는 1820kw를 생산하게 될 세계 최대 규모의 양쯔강 삼협댐은 범세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다. 이것은 향후 황사의 발생빈도가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위해성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황사는 지방정부가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6월 중국과 황사관측과 정보공유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국대륙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모니터링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몽골지역의 황사정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거나 단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향후 황사는 범국가적인 재앙 수준으로 엄습해 올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황사에 대한 체계적인 예보시스템을 가동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밀하게 세워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지역개발연구팀 | 김보국

전북의 청년실업 해법은 없나?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지역의 고용시장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실업 대란을 가져왔다. 특히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청년실업은 전체 실업률의 2배에 가깝고 잠재된 실업까지 합하면 (대학 졸업자의 경우) 4명당 1명꼴로 백수생활을 하는 등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타 실업과는 달리 지역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잠식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욕의 상실로 사회적 이탈행동과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한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청년실업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적지 않은 논의가 있어왔다. 일자리 부족, 고용시장의 경직성, 산업계 변화에 신속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시스템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할 분위기 조성, 교육시스템의 개혁, 실업자 개개인의 노력 등이 강조되는 등 나름대로 청년실업의 대책이 있었다. 이러한 대책과 진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뚜렷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각하다.

2005년도 기준 전라북도의 실업률은 2.5%를 기록하여 전국 평균 실업률(3.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년실업률의 경우는 8.0%로 전국 평균실업률(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절적 요인과 졸업시즌이 겹치는 2006년도 1/4분기중 전라북도의 청년 실업자 수는 11.5%를 기록, 같은 기간 전국실업률(8.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전라북도의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년도별	전체실업률(%)		청년실업률(%)	
	전국	전북	전국	전북
2001년	4.0	3.1	7.3	7.9
2002년	3.3	2.5	6.6	7.0
2003년	3.6	2.7	7.7	8.0
2004년	3.7	2.7	7.9	8.3
2005년	3.7	2.5	7.7	8.0

(전국대비 전북의 실업률비교)

전라북도가 유독 청년 실업률이 높은 원인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37.2%, 진학률은 56.9%로 전국과 비교한 실업률은 낮지만, 전문대졸 취업률은 81.5%, 대졸 취업률은 54.5%로 나타나, 대졸자 취업률이 전국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 설립의 자유화 이후 청년층의 학력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간데 반해 전라북도 지역에는 타 지역보다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데 따른 수요·공급의 불균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전라북도의 청년실업은 그 자체보

다도 고급화 되어 가는 청년층의 일자리를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의 해법은 먼저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은 첫째, 기업들이 경기전망이 불투명하여 선풍 신규채용에 나서지 않고 있는 탓도 크지만, 고용시장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시장 진입자 가운데 고학력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에서 고용수요가 고급화되는 양상을 다소 앞지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고학력 노동력의 빠른 증가는 고학력자의 하향 취업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흡수·조정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는 고학력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졸 학력 청년들의 눈높이 조정을 가로막는 청년층의 직업의식 및 대졸자에 대한 인식 등으로 눈높이가 여전히 높아 수급 불일치가 실업의 심화에 일조하고 있다.

둘째,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취업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참여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 여부에 따라 그 만큼 일자리 제의를 많이 받아 취업이 용이하나 문제는 직업교육 및 훈련 그리고 직업소개 등의 고용시장의 인프라가 취약하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적절한 치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업유치 활성화 및 고급인력이 일할 수 있는 기업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최근 전라북도 기업유치는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파급효과로 23,178명의 일자리 창출로 전년대비 48.8%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2005년도 기준). 이는 청년실업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국내·외 기업을 전라북도에 유치하여 투자확대로 인한 고용창출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직업훈련 강화와 대졸 고급인력의 중소기업으로의 유도방안이 필요하다.

산업계와 교육계의 협력을 통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개발체계가 필요하고, 청년층의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체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대졸자의 고급인력이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작업환경개선지원과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유치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 및 대졸계층에 초점을 맞춰 우선 실업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청년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고, 단계적 및 훈련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실업대책기구를 제도화 해야 한다.

넷째, 산업구조와 직종변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인력수급전망과 고용훈련계획 수립과 기업체,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공동으로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에 관한 고용훈련컨소시엄을 구축하되, 전라북도는 컨소시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경제연구팀 | 나 상균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의 당위성

전라북도의 뛰어난 자연자원 및 영상 인프라를 활용하여 촬영한 영화 및 드라마 등의 영상물들이 성공하면서 전북이 영상물 촬영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2005년도 흥행 영화 베스트 10 중에서 7개 영화가 전북 지역에서 촬영하였으며, 특히 최근 천만 관객을 동원하여 새로운 흥행 기록을 남긴 왕의 남자의 배경이 전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섬진강권역을 중심으로 한 자연 자원을 비롯한 콘텐츠 등을 활용한 영상관광벨트의 조성이 전라북·남도의 공동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실행을 앞두고 있다. 섬진강 영상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사업의 적정성 및 필요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그 성공적 추진을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다.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사업, 정책 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 추진의 가치와 타당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즉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영상관광이라는 컨셉을 최초로 적용하여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며, 한류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동북아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에 일치하는 사업이다. 또한 본 사업은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추진,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식문화강국의 실현 등 국정 과제의 정책적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자립형 지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다.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수도권 중심의 영상 촬영패턴에서 벗어나 전통적이고 자연 지향적인 영상 촬영 패러다임을 관광과 연계하는 중요 사업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 사업이다. 영·호남간, 주변 권역간, 소지역간 공동사업의 발굴 및 협력적 추진을 강화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시대흐름에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권역간 공동사업으로서 모범적인 혁신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면 영상관광산업의 성장동력 창출효과, 공공재로서의 국민 전체의 삶의 질적 향상 효과,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 지역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 시대의 중심축 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대상지역인 전라북도 7개시·군 사업, 총사업비 106,122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2006년 2월 24일 자료 기준), 총사업비를 최종 수요액으로 가정할 때, 사업 완료시까

지 총생산유발액은 177,55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전북 GRDP(219,957억원, 2000년 가격기준)의 0.81%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총 부가가치유발액은 84,341백만원으로 0.3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총 고용유발인원은 1,450명으로 2004년 전북 전체 취업자수(843천명) 대비 0.17%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총취업유발인원은 2,204명으로 0.2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따라서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생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셋째,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의 조건이 적합하다는 점이다.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대상지역인 전라북도는 영상촬영지로서 부상하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시설의 확충, 전라북도의 정책적인 지원, 산·학·연 등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섬진강권역은 중요한 영상촬영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뛰어난 자연 영상미, 원시적 자연환경의 보전, 주변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 계획 대상지로서의 조건 적합성이 충분하다.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정점으로 관련 계획 및 사업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어 혁신 모델 지역으로 성장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다.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전라북도의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으로 인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특히, 고군산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 전통한옥마을 육성 등을 수립하고 있어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광객 유치의 전략적 거점 도시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

이와 같이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그 타당한 논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조속히 확정하여 사업 방향과 일치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전라남도의 관련 계획 및 시설들과의 연계, 활용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은 상호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영상 문화시대의 신패러다임에 부응하고 특화된 지역 영상 문화자원의 보존 및 개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영상관광 허브 창출의 원동력 제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현, 영상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사업, 상위계획과 정부 정책 일치성 확보, 국정과제와의 일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 사업이다.

문화·관광연구팀장 | 이 동 기

과학기술혁신 포럼 토론 요약

본 연구원에서는 전라북도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주관으로 4월 20일(목) 과학기술혁신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제39주년 과학기술의 날」을 기념하여 전라북도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개최한 「제1회 전라북도 과학축전」의 메인행사로 개최되었다. 본 포럼은 전라북도의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운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조정관,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문경일 서울시장개발연구원 산학연지원센터 기획팀장, 김용만 전라북도 과학산업과장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가운데 기초강연인 정운 조정관의 「국내외 과학기술동향과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에 대해 강연과 토론 내용을 요약하였다. 편집자 註



글로벌 시대의 구축이라는 21세기 신국제 질서가 전개되면서 과학기술은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핵심요소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유형적 요소보다 지식, 정보, 기술, 브랜드 경영능력 등의 무형적 요소가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지식기반경제의 시대에 국가와 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으로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과학기술 현황을 보면 미국은 미래 경쟁력 개발을 위한 전략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21세기를 대비한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국방, 생명, 우주, 에너지, 나노 분야를 중심으로 2005년에만 1,315억 불에 이르는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06~10)'에서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NT·재료 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10대 기간기술과 7대 신산업 창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제7차 Framework Program(07~13)'에서 생명공학, 정보통신, 나노, 우주, 환경 등 분야에 732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신흥경제국에서도 과학기술진흥은 국가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과학기술이 제1 생산력'이라는 기치 하에 세계의 생산기지에서 연구기지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소프트웨어와 IT 분야에서 세계적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과학기술진흥정책에 힘입어 국가과학기술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역량을 보면 2004년 IMD 과학경쟁력은 세계 19위, IMD 기술경쟁력은 8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과학기술의 성장에 힘입어 산업경쟁력도 강화되어 CDMA, 메모리 반도체, TFT-LCD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시장 점유율이 1위이며, 자동차도 5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IT산업 부품, 소재의 수입의존도가 65% 내외에 달하는 등 과학기술혁신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획과 종합조정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추진체제를 개편하고,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표 참조).

〈국가과학기술 중점 추진과제〉

과 제	추진 방안
국가 R&D 정책, 제도, 사업, 예산의 효율화,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R&D 기본계획수립(중·장기, 과기기본계획·NIS),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 분석, 평가(전문성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조정, 배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장관회의/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연계체계 구축
국가성장동력 발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반도체, 로봇, Display 등 44개제품, 150개기술(5년) •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BT(유전체, 단백질, 신약 등), NT(나노소재, 소자, 기기 등) 등 22개사업(10년) •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실용화-자기부상열차, Wig선 등(3~5년 제품개발)
기초, 원천기술 및 공공, 미래선도 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R&D 중 기초연구비중 확대(05, 21.5% → 07, 25%) • 우주, 해양, 에너지, 원자력, BT/NT 및 대형연구시설(가속기, 나노Fab, 시험동물, MRI, 초고압현미경, 비행시험 등) 고급화
과학기술 예산배분 조정과 투자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투자(GDP 비율) : 8-10위 수준(미국 1/18, 일본 1/8) • 21세기 5년간의 기반구축 - 선택·집중 - 성과평가·전문성 검토 강화
고급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산업, 기술전망 - 유가, 환율, 원자재, 국제금리 등 대외 의존도형 구조 • 산·학 협력 - IT, 반도체, 자동차 - 전문화, 융합화, 융합화 • 산연구개발사업 / 특장분야 훈련센터 / 기반지원 - 구조개혁 등
출연(연)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연구·과학기술자 우대 - 기본사업비, 인센티브, 정년, 연금 등 • 전문성·경쟁력 강화 - Top Brand 특성화, 성과분석·홍보, 해외협력 확대 등

국가과학기술진흥정책에서 지방과학기술진흥은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던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R&D예산의 지방투자 비중을 2007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 각 지역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연구개발 수요와 특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를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진흥과 이에 기반한 지역발전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정운 조정관의 강연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과학기술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의 산업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에 따른 기초연구분야의 상대적 침체를 개선하기 위해 순수학문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정운 조정관은 지방정부의 연구개발예산 확대를 위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답하고, 중요한 점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과 지역의 과학기술인과 관련 혁신주체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초연구분야의 지원을 위해서 개인단위의 소규모 과제 비중을 증대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수립 심포지움



본원은 5월 8일「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군 발전방향 심포지움을 각 시·군 기획예산과장과 본원 연구진, 도 실무작업반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 하였다.

이번 행사는 14개 시·군이 발전방향으로 제시하는 목표전략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상 전라북도의 기본목표와 발전방향이라는 큰 틀에 근거하여 각종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이 도의 부문별 계획내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개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4월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본원 연구진 15명과 도 실무작업반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워크숍」을 갖고 새만금신항만의 반영 등을 포함한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내 여건변화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하위계획으로서 전북비전에 부합하는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수립을 위해 도 기획단(실무작업반)과 본원 소속 연구진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형성하여 계획수립과정의 주요 관심사 등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논의 하였다.

전북·충남 RHRD(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춘계 공동 심포지움

본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지난 5월 19일(금)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 함께 전라북도 중회의실에서 「전북·충남지역 해외이주결혼가정 지원을 통한 RHRD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승응배(교육인적자원부 정책조정과장), 이성미(여성가족부 가족문화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해외이주결혼가정에 대한 중앙의 정책방향을 들어보고, 박재규(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윤애란(충남 우리가족상담센터소장), 이현선(장수민들레결혼이민자센터장)의 정책사례 발제와 열린 토론이 열렸다. 또한, KBS PLUS 대표 신동환, 장수초등학교 교장 등 관련 있는 각계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로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정책저널 '전북발전포럼' 발간



「전북발전포럼」 춘계호(창간호)가 5월 중에 발간된다. 계간으로 발간하는 「전북발전포럼」은 지역이 지닌 현안과 개발과제를 지역의 시각뿐만 아니라 국가적, 세계적 시각에서 조망하고, 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 및 지역정책과 관련된 기획연구를 장려하여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계층에 대하여 열려있는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창간호에서는 최근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불균형 문제를 전북에 조명해서 특집으로 다루었다. 특집은 지역 간 불균형, 산업구조상 불균형, 시장유통의 불균형, 사회소의 계층의 문제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불균형의 원인과 실태를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했다.

「전북발전포럼」 원고모집

- 원고성격 : 지역현안 등과 관련된 칼럼, 논문 등
- 제출기한 : 수시모집
- 제출방법 : 이메일(이메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디스켓과 함께 제출),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소식

「2006년도 사업 소개」

전라북도는 2005년 인적자원개발사업 결과와 2006년 사업계획서 공모결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배정받게 되었다.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2006년 총 18개 사업 가운데 아래의 6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 HRD담당자 마인드 교육
- 전북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 전북 인적자원 DB 구축 및 활용사업
- 전북 인적자원 지표개발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 활용방안 연구
- 전북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연구회 지원

「전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e-뉴스레터 발간」

- 발송기간 : 2006. 4 ~ 12(월 1회 발송, 총10회발송예정)
- 발송목적 : 전북 인적자원개발 동향을 홍보하여 도민의 참여 극대화
- 발송방법 : 이메일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 소식

- ▶ 4월 6일 :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평가
- ▶ 4월 24일 : 2007년도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평가회의
- ▶ 4월 25일 :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 우선순위의 심의 및 확정 회의

연구원 춘계 체육행사

본원은 지난 4월 21일 순창 강천산에서 춘계체육행사를 개최했다. 순창에 있는 (주)대상 고추장공장 현장을 답사하고, 전라북도 산림박물관을 견학했으며 강천산 산행에 이어 체육대회를 함께 가져 모처럼 야외에서 전직원들이 단합을 도모했다.

연구원 동정

- 한영주 원장은 5월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3주년 심포지움」 참석
- 여성정책연구소 전정희 소장은 5.3~4일 충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주최하는 여성정책네트워크 워크샵에 참석
- 이승형 연구위원은 '2007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현장조사'(농림부, 한국농촌공사)에 선정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참여
- 이강진 연구위원은 5월 3일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에서 「2006년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선정 작업에 평가위원으로 참여

알림 「연구과제」 공모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본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송부해 드리며, 심사를 거쳐 공동연구참여 등의 기회를 드립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홈페이지 www.jd.re.kr(연구제안)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